

▶ 전북도의회 행자위 소방본부·감사관·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

“소방헬기 관련 사고로 인명피해”

“적극적인 행정에 면책을”
“소방서 없는 시군 있다”
“실무에서 사용할 교육용”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송성환)는 20일, 제335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소방본부, 감사관,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송성환 위원장(전주3)은 공직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청렴이라고 생각하며,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감사기능을 능동적으로 수행해주시기를 부탁했다. 또 송 위원장은 사전 컨설팅 감사가 긍정적인 제도로 보이는데 향후 감사는 사후적, 징벌적 성격에서 벗어나 사전적, 계도적 성격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송 위원장은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면책을 통해 능동적인 행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성환 위원장

최영일 의원(순창)은 소방서가 없는 시군이 있다. 법이나 조례 어디를 찾아봐도 설치를 제한하는 어떤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데도 설치계획조차 없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빠른 시간 내에 설치계획을 검토해 도민이 어디에 거주하는 동등한 수준의 소방 안전 편익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최영일 의원

김대중 의원(익산)은 충분한 검토 없이 추경에서 예산 변경한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할 것과 전국 평균정도 크기의 소방정을 건조 중인 데 오래 사용해야 하는 장비들은 충분히 장래를 예측, 적정한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대중 의원

김종철 의원(전주7)은 소방은 내부에서

수행하는 것이 아닌 외부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면서 도민이 실제 현장에서 겪는 재난을 제거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한박자 빠른 사전 예방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김종철 의원

송지용 의원(완주1)은 실무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고 응용 가능한 전문교육, 소양교육을 통해 미래 행정수요에 사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 과정을 꾸준히 개설, 배움을 통한 창조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송지용 의원

정호영 의원(김제1)은 최근 소방헬기 관련 사고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정호영 의원

소방 관련 사고는 작은 실수가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보다 힘써 주기를 주문했다.

최인정 의원(군산3)은 화재출동 끝난타임 확인하는 도민의 재산과 생명, 소방관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 도서지역이나 도심지역에 구분 없이 도민이라면 누구나 동등한 안전을 보장받아야 하는 만큼 실질적인 끝난타임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인정 의원

허남주 의원(비례)은 소방헬기 노후화 문제가 이전부터 제기됐다. 관련 사고가 도내에서 발생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교체 비용이 비싸더라도 도민 안전을 위해서 노후헬기 교체 예산 확보에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허남주 의원

/신광영 기자

이해숙, 도교육청노조 감사패 받아 교육행정공무원 근무여건 개선·복지향상 기여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해숙(더불어민주당, 전주5) 부위원장은 최근 전라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지공노)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20일 도의회 교육위에 따르면, 지난 18일 이해숙 의원은 교육행정공무원 근무여건 개선과 복지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해숙 의원은 지난해부터 지공노 과석철 위원장을 비롯한 지공노 회원 및 전라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과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하고, 의견을 반영해 입법발의하는 등 도내 3,800여명의 교육행정공무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했다.

또 교육공무원 근무여건을 위해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수정 발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해숙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장기재직휴가와 학교행정실 근무 공무원들의 재량휴업일 휴무가 가능해졌다”면서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폐기됐던 장기재직휴가와 동일기관에서 근무하면서 교원과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았던 재량휴업일 휴무 등이 가능해져 지방공무원의 사기가 진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광영 기자

정의당 도당, 우레탄 트랙 철거 촉구

정의당 전북도당은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설치된 우레탄 트랙 철거를 촉구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도내 우레탄 트랙 설치 143개 학교 중 68%(초등학교 43개, 중학교 23개, 고등학교 30개, 특수2)인 98개교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이 검출됐다”며 “아이들 안전을 위협하는 우레탄 트랙 철거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도 교육청이 1차로 47개 학교에 대해서 개학이전까지 철거완료하고 나머지 51개 학교는 내년 2월까지 철거를 마치겠다고 밝혔다”면서 “내년 2월까지 2차 철거하겠다는 학교에 대한 피해가 얼마나 최소화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하루속히 예산을 확보해 여름방학 내 트랙교체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어 “21일 전주북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우레탄 트랙 교체 서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전북교육청이 서둘러 우레탄 트랙교체에 나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광영 기자

양용모 “교육감 폭행사건 어린이집 관계자 사법처리 최소화와 선처를”

전북도의회 양용모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8)은 교육감 폭행사건 사법처리와 관련해 “어린이집 관계자에 대한 사법처리 최소화와 선처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20일 성명서를 내고 “경찰이 지난달 9일 벌어진 어린이집연합회 소속 회원들의 김승환 교육감 일행 폭행사건에 대해 17명 불구속 입건을 확정했다”면서 “교육감 일행 폭행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 응호하거나 면책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나 선처와 사법처리 최소화를 호소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무엇보다도 이번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의 누리과정 무상보육에 대한 약속 위반으로 벌어진 측면이 크다. 또 사법처리가 누리과정 갈등이나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물리적 충돌의 피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고 개인적인 문제로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법처리 최소화를 거듭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신광영 기자

정운천, 노후주택 지원 관계법 3건 발의

국회 정운천(새누리당, 전주) 의원은 20일, 노후주택 지원을 위한 3건의 관계법 제·개정안을 발의했다.

3가지 법안은, ▲노후주택 정비·개량을 지원하는 노후주택 정비 특별법 제정안 ▲유지·보수를 지원하는 건축법 일부개정안 ▲주거약자의 노후주택을 지원하는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이다.

정운천 의원은 “전북도민과 전주 시민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들의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을 개선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며, “현재 3가지 관계법을 동시에 발의하여 다각적인 법률 근거를 마련한 만큼, 추후 법률안 통과는 물론 사업시행까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을 도모하겠다”고 전했다. /신광영 기자

우병우 “정무적 책임질 생각 없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본인과 관련된 각종 의혹 제기로 야당에서 시효 요구가 나오고 있는 데 대해 “정무적으로 책임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무적으로 책임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무적으로 책임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김정주, 정은호, 이만희 등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며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하지 않은 의혹 제기에 대해서 (정무적) 책임을 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새누리 전대 ‘마이네리그’로 전략

20일 앞으로 다가온 새누리당 8·9 전당대회에서 유력주자들이 잇따라 불출마를 선언해 거물급 없는 ‘마이네리그’로 전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경환 의원에 이어 서청원, 나경원 의원이 출마를 포기하면서 상대적으로 정치적 무게감이 떨어지는 주자들 간 경쟁이 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뚜렷한 우세를 보이는 주자도 없고, 현저히 약세에 처한 후보도 없는 ‘도토리 키재기’ 전당대회로 전략했다는 냉소적 반응도 나오고 있다.

친박계는 좌장 격이던 최경환 의원에 이어 말쑥 서청원 의원까지 전대 출마를 포기하면서 더이상 내홍을 대표 선수가 없는 상황이다. 일부 친박 인사들이 흥분중 의원을 친박 대표주자로 내세우자는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지만 다수 분위기는 싸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이들 중 이주영, 한선교, 이정현 의원 등이 친박계로 분류되지만 친박계에서 이들 중 한명을 조직적으로 밀 가능성은 없는 상황이다.

비박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전대 초반만 하더라도 친박계 최경환 의원에 맞서 유승민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친박과 비박의 ‘끝장 대결’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유 의원이 일찌감치 전대 불출마 입장을 밝히며 내년 대선 준비로 방향을 틀면서 ‘빅매치’는 무산됐다.

이어 친박계 서청원 의원과 비박계 나경원 의원의 격돌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친박계 공천개입 의혹과 파문으로 인해 장고 중이었던 서 의원이 결국 불출마 선언을 했고, 나 의원도 불출마를 선언했다.

비박계에서는 정병국, 주호영, 김용태 의원 등이 친박 패권주의 청산을 구호로 당권 도전에 나섰다. 비박계의 ‘공공의 적’이던 서청원, 최경환 의원이 무대에서 내려오자, 이들 비박계 인사들의 혁신 구호도 겹도는 느낌이다. /뉴시스

“친박 협박공천, 대통령 탈당 검토를”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친박계 최경환·윤상현 의원, 현기환 정무수석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이 내년 대통령 선거 중립을 선언하기 바란다. 선거중립에 필요하면 새누리당 탈당도 검토해 봐야한다”고 압박했다.

이재정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합리적 의심과 풍문으로 떠돌던 친박, 청와대의 공천 개입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친박의 권형민 서청원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친박들은 압박·협박을 서슴지 않았다”며 “보스를 위해 물불안 가리는 조폭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다”고 힐난했다. /뉴시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한 사업에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국책사업 지방비 부담·지역 차별 중단 촉구”

전북도의회 행자위, 지덕권 산림치유원 지방비 요구 - 경북 영주 산림 치유원 전액 국비

전북도의회가 국책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요구와 타 지역과의 차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한 사업에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2017년 국가예산 심의동향을 보면 전북도의 주요현안 사업들이 기재부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어 도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우선 고려하라”고 지적했다.

이들이 대표적으로 꼽은 지역차별사업은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이다. 이와 성격이 유사한 경북 영주 산림 치유원은 조성비와 운영비 전액이 국비로 추진되지만 지덕권 산림 치유원은 사업비 50%와 운영비 전액을 지방비로 할 것을 정부가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경북 영주 산림 치유원은 시설조성(1,413억원)과 운영비(160억원) 전액이 국비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전북도 대표 국책사업인 새

세천환을 촉구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우선 고려하라”고 지적했다.

이들이 대표적으로 꼽은 지역차별사업은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이다. 이와 성격이 유사한 경북 영주 산림 치유원은 조성비와 운영비 전액이 국비로 추진되지만 지덕권 산림 치유원은 사업비 50%와 운영비 전액을 지방비로 할 것을 정부가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경북 영주 산림 치유원은 시설조성(1,413억원)과 운영비(160억원) 전액이 국비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전북도 대표 국책사업인 새

만금 사업도 국가예산 반영 필요성이 지적됐다.

이들은 “새만금 사업은 순 국비 11조원대 국책사업이지만 2016년 현재 34.2%인 국비 3조7,600억원만이 투입됐다. 특히 1단계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서는 2020년까지 국비 7조3,700억원이 소요돼 향후 4년간 매년 9,200억원이 투입되어야 하지만 최근 3년간 투입액이 평균 6,000억원에 불과하다”며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과 민간투자유치를 위해서라도 2017년 국가예산 요구액 모두가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광영 기자

야권, 검찰 개혁 한목소리… 이번엔 성과 낼까

홍만표 게이트, 진경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의 ‘주식 대박 사건’ 등 잇단 법조비리 사건이 불거지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나란히 검찰 개혁을 주문하고 나섰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19일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추진에 합의했다.

두 원내대표는 20일 비대위에서 나란히 공수처 신설 관련 양당의 합의 사실을 밝히면서 검찰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어제 박지원 원내대표와 만나 공수처 신설 관련원 합의

했다”며 “8월 국회에서 공수처 법안이 다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도 “추후 국회에서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입법 공조를 통해 공수처 설치를 관철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국민의당은 공수처 신설에 새누리당도 동참하라며 압박에 나섰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도 공수처 신설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공수처 신설 법안을 공동발의 하자고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더민주·국민의당 공수처 신설 추진 합의

하지만 새누리당은 내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일치된 당론을 만들지 미지수다. 새누리당 비박계 당권 주자로 판사 출신인 주호영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열린 아침 김만홍입니다’에 출연, “전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검찰권이 비대한 나라가 없는데, 정작 검찰을 견제할 거구나 조직은 별로 없다”며 공수처 신설을 주장했다.

하지만 검사 출신인 친박 김진태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사집중’에 출연, “어떤 사건 하나를 가지고 제도 자체를 바꿀 수 없다”고 공수처 신설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뉴시스